

“미래한국당 15석도 가능”...초조한 민주 “가짜 정당” 맹공

이인영 “미래한국당 등록, 선관위 엄정히 판단해야”

‘미래한국통합신당’ 당명 정하자 “도로 친박당이나” 비판

자유한국당이 바뀐 선거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만든 ‘미래한국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비례민주당’ 등으로 맞대응하지 않기로 한 만큼 미래한국당 카드를 꺼낸 한국당에 비해 비례대표 선거에서 상당 부분 손해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을 불허해야 한다고 연일 촉구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미래한국당 창당은 헌법과 개정선거법 취지를 훼손하는 퇴행적 행위”라며 “선관위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재차 선관위를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래한국당은 종이정당, 창고정당, 위장정당인 데다 독자적 당헌이나 정강정책, 독립 사무실도 없는 가짜정당”이라며 “이런 가짜정당을 선관위가 용인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미래한국통합신당”으로 보수통합신당명을 정한

데 대해 “분장만 고친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이제 ‘위장정당’ 짚수는 스스로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래한국통합신당”이란 새 당명은 비례의석수 확대를 위해 만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염두에 둔 결정이다. 당명을 혼동할 수 있는 보수성향 유권자들의 이탈을 막겠다는 의도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도로친박당”이 되지 않기 위해선 정쟁은 지양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과거 친박당과 무엇이 다른지 국민들은 알 수가 없다. 총선

무대에 대비해 국민의 눈만 속이려 하는 의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날도 민주당은 이재정 대변인을 통해 “선관위가 자유한국당과 ‘짚짜미’를 했다”고 거칠게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틀째 지도부 회의에서 미래한국당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선관위에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을 불허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미래한국당과 같은 가짜정당이 만들어지는 것을 선관위가 허용하면 매년 선거 때마다 이런 당이 만들어졌다가 합쳐졌다 할 것”이라며 “이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기에, 선관위가 미래

한국당을 불허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한계는 인정했다. 선관위가 정당등록을 결국 허용할 것이라는 게 민주당 내부의 예상이다. 그래서 더욱 당의 우려가 크다는 것.

박 원내대변인은 “물리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관위의 판단에 달려 있고 그 결정을 (무엇이라고) 예단해서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이 미래한국당에 대응하는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정당투표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이번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의

석(30석)은 가져가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기존 방식대로 배분되는 비례의석(17석)을 통해 한자릿수의 비례의석을 확보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원내대변인은 “물리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관위의 판단에 달려 있고 그 결정을 (무엇이라고) 예단해서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이 미래한국당에 대응하는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정당투표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이번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의석(30석)은 가져가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뉴스

여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다음달 5일 본회의 처리하기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와 이재의 자유한국당 간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회동을 갖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여야는 13일 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다음달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과 자유

한국당 간사인 이재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장인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과 만나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 간사는 김차장으로부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획정위의 논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다음달 5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주요일정 및 과정 등을 공유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기탁금과 관련한 공식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홍 의원은 “국회가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에 대해 선관위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다”며 “선관위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기탁금 관련해 조속한 공식선거법 개정을 요청했고,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25일에 이를 해소하고, 선거구 획정안을 3월 본회의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오는 24일까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통보해야 향후 국회의결절차 및 선거일정에 차질이 없겠다고 하는 희망사항을 얘기했다”며 “세부적인 사항은 오늘 회동한 내용을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당 지도부의 의견을 받아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與 당측 요구로 복당한 의원에 페널티 ‘면제’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요구에 의해 복당한 총선 예비후보자들에게 대해 탈당 페널티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13일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 따르면 전남 열린 중앙당 최고위원회의는 서정성·배용태·박중수·김승남 후보에 대해 탈당자에게 적용되는 25%의 감점 불이익 규정을 면제할 것을 의결했다.

뉴스

국민새정당 비슷하다고 ‘국민당’도 불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 신당’에 이어 ‘국민당’마저 당명으로 쓸 수 없다고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에 통보했다. 국민당측은 선관위가 “청와대 눈치를 보고 스스로 정치를 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13일 국민당 창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국민당에 공문을 통해 ‘국민당’ 당명이 기존 등록 정당인 ‘국민새정당’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명 사용을 불허했다.

앞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뒤 신당 창당에 나서면서 당명으로 ‘안철수신당’을 추진했지만 선관위는 이에 대해서도 불허한 바 있다.

이에 국민당 측에서는 과거 ‘국민의당’이 있을 때는 ‘국민새정당’ 당명 등록을 허락하고, 현재는 ‘국민당’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식의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당 창준위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유

사명칭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뒤집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유사명칭이라고 판단했다”며 “국민의당과 국민당이아말로 오히려 유사명칭으로 보이는데 선관위는 간단한 논리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안철수신당’ 불허에 이어 ‘국민당’ 불허 결정을 들어 “한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두번은 필연”이라며 “선관위가 청와대 눈치를 보며 스스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뉴스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정의 혁신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安風 진원지’ 광주전남 안철수 국민당에 누가 참여하나

‘안철수 신당’인 국민당에 광주·전남에서는 옛 국민의당 인사 등 300여명이 합류할 예정이다.

국민당 광주시당 창당준비단은 16일 오후 5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민당 광주시당 창당 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창당대회는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을 비롯해 현재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 7~8명과 당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광주·전남에서는 전 바른미래당 광주시장 후보였던 전덕영 전남대학교수와 국민의당 창당 작업에 함께했던 조정관 교수, 김승평 조선대 명예교수, 박래호 전 바른미래당 전남지사 후보, 유재신 전 광주시 약사회장, 김

옥자 전 광주시의원 등이 참여한다.

국민당 광주시당위원장에는 권은희 의원이 내정된 가운데 바른미래당 탈당이 늦어질 경우 다른 인사가 임시로 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시당 사무처장에는 곡복률 전 광주전남 민원련 상임대표가 임명될 예정이다.

권은희 광주시당 창당준비단장은 “넓은 진영정치와 뿌리깊은 권위주의에 맞서 투쟁하는 실용정치의 길을 가겠다”며 “국민이 행복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하는 정당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파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약속해주세요